

2026년  
고3  
3월 학평

## 2026년 시행 고3 3월 학평 국어 독서 | 수사과 변호, 형사소송법 직전 보강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것만은 알고 시험장에 가자!

### AI 직전 보강



선생님, 주제 통합 지문인 ‘수사와 변호’와 ‘형사소송법’에서는 주로 어떤 문제들이 출제되나요?

여기서는 (가)와 (나) 글의 정보 전개 방식을 비교하는 문제, 영장주의나 적부 심사 같은 세부적인 법률 제도를 이해하는 문제, 두 제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하는 문제, 그리고 주어진 구체적 사례(보기)에 법률 지식을 적용하는 고난도 문제가 주로 출제된단다.



(가)는 강제 처분을 하기 전에 영장을 받아야 한다는 ‘사전 통제’를 다루고, (나)는 이미 체포나 구속이 된 후에 그게 정당한지 따져보는 ‘사후 통제’인 적부 심사를 다루는 거죠?

정확하게 짚었네! 국가가 개인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강제력을 행사할 때, 권력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예방하고 사후에 견제하는 법적 장치들이 이 글의 핵심이지.



그런데 저는 모의고사 6번 문제가 헷갈렸어요. ㉠ 영장 실질 심사와 ㉡ 구속 적부 심사를 비교하는 문제였는데, 3번 선지에서 ㉠이 생략될 수도 있다는 게 왜 틀린 설명인가요? 긴급 체포나 현행범 체포는 영장 없이도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본문을 아주 세밀하게 구분해서 읽어야 한단다. 긴급 체포나 현행범 체포는 ‘체포’의 예외 상황이야. 하지만 ㉠ ‘영장 실질 심사’는 체포가 아니라 ‘구속’ 영장 발부 이전에 실시되는 심사지. 본문 (가)의 마지막 문단에 구속은 예외 없이 영장주의가 적용되고, 법원은 정해진 기일 내에 ‘반드시’ 피의자 심문을 실시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단다.



헉! 체포랑 구속을 뭉뚱그려서 생각했어요. 구속은 장기간 전면적으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니까 예외 없이 무조건 영장 실질 심사를 받아야 하는 거군요.

그렇지! 반면에 ㉠ 구속 적부 심사는 피의자 측의 '청구'가 있어야만 진행되는 제도야. 청구가 없으면 시행되지 않으니 상황에 따라 생략될 수도 있는 거지.



아하, 제도의 시행 요건이 완전히 다르네요. 8번 문제도 구체적인 사례를 적용하는 거라 어려웠어요. 3번 선지에서 법원이 구속 영장을 발부한 이유가 '이미 행해진 강제 처분의 정당성을 심사할 필요가 있어서'라는 설명이 왜 적절하지 않은 건가요? 잘 이해가 안 돼요.



그것도 '영장 실질 심사'와 '적부 심사'의 개념 차이를 묻는 문제란다. 법원이 구속 영장을 발부하는 것은 앞으로 갑을 '구속해도 된다'고 사전에 허가해 주는 거야. 즉, 예방적 통제 장치지. 반면에 '이미 행해진 강제 처분의 정당성을 심사'하는 것은 사후 검증 절차인 '적부 심사'의 역할이란다.



아! 구속 영장 발부는 사전 허가이고, 이미 행해진 체포나 구속에 대한 정당성 심사는 사후 점검인 적부 심사에 해당하는 거군요! 두 제도의 목적과 시점을 명확히 구분해야만 풀 수 있는 문제였네요.



그렇지. 법학 지문에서는 제도의 주체, 대상, 적용 시점, 예외 상황 등을 아주 엄격하게 구분하며 읽어야 해. 이처럼 두 제도의 차이점을 명확히 비교하거나, 실제 사례에 법적 절차를 정확히 대입하여 판단하는 것과 같은 문제가 출제될 수 있으니 꼼꼼히 공부해 두렴.



네, 오늘도 감사합니다!



2026년  
고3  
3월 학평

2026년 시행 고3 3월 학평 국어 독서 | 수사와 변호, 형사소송법 분석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지문 분석

(가)

국가는 형사 절차를 통해 개인에게 강제력을 행사한다. **형사 절차에서 이루어지는 체포나 구속과 같은 강제 처분은 신체의 자유를 제한한다.**(강제 처분의 특징: 신체의 자유 제한) [ 수사 기관이 강제 처분의 행사를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한다면 **권한이 남용되어 인권 침해로 이어질 위험**(수사 기관의 자체적 판단이 갖는 위험성)이 크다. 따라서 **강제 처분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영장주의의 개념) 이 원칙을 영장주의라고 한다. ]([ ]: 인권 침해 방지를 위한 예방적 통제 장치로서 영장주의의 개념과 도입 목적. **영장주의의 목적을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 강제 처분의 권한 남용을 예방하기 위한 영장주의 원칙

영장주의에 따라 수사 기관은 강제 처분을 행사하기 전에 법원에 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 영장은 **국가의 권한 행사가 합법적인 것이라는 판단을 명시적으로 드러내는 허가 문서**(영장의 의의)이면서, 기본권 제한의 정당성을 사전에 심사했다는 것을 드러내는 표지이기도 하다. ]([ ]: 개인을 보호하는 예방적 통제 장치로서 영장이 지니는 정당성 부여의 기능) 이 점에서 영장주의는 개인을 보호하는 예방적 통제 장치로 기능한다.

▶ 예방적 통제 장치로서 강제 처분에 정당성을 심사하는 영장의 기능

영장주의가 모든 사안에 항상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체포는 수사를 위해 개인의 신체를 일시적으로 확보하는 조치이므로 원칙적으로 영장이 필요하다. 하지만 **영장 발부를 기다리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긴급 체포나 현행범 체포의 경우**(강제 처분에 대한 영장주의의 예외적 상황. **사례를 제시하고 영장주의의 예외적 상황에 해당하는지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에는 체포 영장이 없어도 강제력 행사가 가능하다. **이때 강제 처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사전 승인이 아닌 사후 검증의 성격을 띠게 된다.**(영장 없이 이루어진 체포에 대한 법원의 적법성 판단은 사후에 진행됨.)

▶ 체포의 성격과 영장주의가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상황

구속은 체포와 달리 신체의 자유를 장기간에 걸쳐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강력한 조치이므로 **예외 없이 영장주의가 적용된다.**(체포와 구별되는 구속의 원칙적 특징. **체포와 구속을 비교, 대조하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법관이 수사 기록만을 검토하여 구속 영장의 발부를 결정하였으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따라서 **수사 기록의 검토와 함께 법관이 피의자를 심문하여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영장 실질 심사가 도입되었다.**(피의자의 신체적 자유 제한을 예방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진행되는 사전 절차) 수사 기관이 구속 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은 정해진 기일 내에 반드시 피의자 심문을 실시해야 한다. 이는 범죄 혐의의 상당성, 도주나 증거 인멸의 위험과 같은 구속 요건을 검증하는 절차를 강화함으로써 구속 영장이 발부되는 문턱을 과거보다 실질적으로 높인 장치라 할 수 있다.

▶ 구속의 성격과 피의자 심문을 통해 영장 발부 요건을 강화한 영장 실질 심사

(나)

**적부 심사는 체포되거나 구속된 개인이 그 처분이 법적으로 정당한지에 대한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이다.**(이미 행사된 강제 처분에 대한 점검 절차인 적부 심사의 개념) 이는 형사 절차 중에 행하여진 강제 처분이 적법한 절차를 따랐는지와 실질적으로 필요했는지를 점검하기 위한 것이다. **체포 또는 구속이 이루어진 시점은 이미 개인에 대한 국가의 강제력이 행사된 상태이지만, 적부 심사는 그 효력이 유지될 수 있는**

지를 판단하도록 하여 국가의 권한을 제도적으로 견제한다.(강제 처분의 유지 여부를 점검하여 국가 권력을 사후적으로 견제하는 목적. **적부 심사의 목적을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 이미 행사된 강제 처분의 효력 유지 여부를 판단하는 사후 견제 제도인 적부 심사

**적부 심사의 청구권자는 피의자 본인뿐 아니라 그 변호인, 법정 대리인, 친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까지 폭넓게 인정된다.**(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피의자를 보호하기 위한 청구권자의 폭넓은 인정 범위) 이는 피의자가 강제 처분으로 인해 방어권을 행사하기가 실제로는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하여 주변의 다양한 주체가 이미 행사된 강제 처분의 적법성 다툼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청구서가 접수되면 법원은 48시간 내에 체포 혹은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해야 한다. 심문 과정에는 수사 기관과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고 청구권자의 참여도 가능하다. **법관은 체포 또는 구속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는지, 범죄 혐의의 상당성과 도주 또는 증거 인멸의 위험과 같은 강제 처분의 법률상 요건이 충족되었는지를 확인한다.**(적부 심사에서 강제 처분의 유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법관의 구체적인 심사 요건) 그리고 증거의 적법성과 피의자의 진술 등을 심사하여 강제 처분이 유지될 필요가 있는지를 판단한다.

▶ 피의자 방어권 보장을 위한 적부 심사의 폭넓은 청구권자와 구체적인 심사 내용

**구속 적부 심사에서 영장 발부가 적법했다라도 이후 상황에서 피의자의 도주 또는 증거 인멸의 위험이 사라졌다면, 법원은 피의자의 석방을 결정하고 피의자는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받게 된다.**(강제 처분의 법률상 요건 소멸 시 강제 처분은 유지되지 않음. 사례를 제시하고 강제 처분의 유지 여부를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이는 영장 발부라는 일회적 판단이 강제 처분의 정당성을 지속적으로 담보할 수 없다는 점을 제도적으로 반영한 결과이다.(영장 발부의 한계를 보완하는 구속 적부 심사의 역할) 즉 강제 처분은 합법적인 권력 행사이지만, 적부 심사는 강제 처분이 이루어진 이후 그 효력의 유지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라는 점에서 강제 처분에 대한 사법적 통제가 다양한 시점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 준다.

▶ 일회적 영장 발부의 한계를 보완하며 강제 처분을 지속적으로 통제하는 사법적 장치의 의의

#### (가) 수사와 변호

##### 핵심 정리

- 주제: 형사 절차에서의 강제 처분과 이를 예방적으로 통제하는 영장주의
- 구성
  - 1문단: 강제 처분의 권한 남용을 예방하기 위한 영장주의 원칙
  - 2문단: 예방적 통제 장치로서 강제 처분에 정당성을 심사하는 영장의 기능
  - 3문단: 체포의 성격과 영장주의가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상황
  - 4문단: 구속의 성격과 피의자 심문을 통해 영장 발부 요건을 강화한 영장 실질 심사

##### 해제

이 글은 국가가 형사 절차에서 개인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강제 처분을 행사할 때, 권력 남용을 막고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사전적 통제 장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강제 처분 행사에 앞서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받아야 한다는 ‘영장주의’의 원칙과 그 예외 상황을 다루며, 나아가 구속 영장 발부의 문턱을 실질적으로 높이기 위해 피의자를 심문하는 ‘영장 실질 심사’의 개념과 의의를 밝히고 있다.

## (나) 형사소송법

### 핵심 정리

- 주제: 이미 행사된 강제 처분에 대한 사법적 통제 절차로서의 적부 심사
- 구성
  - 1문단: 이미 행사된 강제 처분의 효력 유지 여부를 판단하는 사후 견제 제도인 적부 심사
  - 2문단: 피의자 방어권 보장을 위한 적부 심사의 폭넓은 청구권자와 구체적인 심사 내용
  - 3문단: 일회적 영장 발부의 한계를 보완하며 강제 처분을 지속적으로 통제하는 사법적 장치의 의의

### 해제

이 글은 이미 강제 처분이 행사된 이후에 개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국가의 권력 행사를 사후적으로 견제하기 위한 제도인 ‘적부 심사’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적부 심사의 폭넓은 청구권자와 법관의 구체적인 심사 요건을 안내하며, 영장 발부라는 일회적 판단의 한계를 보완하여 강제 처분의 정당성을 지속적으로 심사하고 사법적 통제를 다각화하는 제도의 의의를 짚어 주고 있다.

서지정보

저자 정빛나

발행처 나무아카데미

isbn 979-11-377-9740-6

제본형태 hwp pdf 파일

발행일 2026.04.06.

가격 1,500원

